

## 제1과목 : 노동법 (1)

1.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,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·징수하지 못한다.

2.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
- ②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.
- ③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3.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
-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.
-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4.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,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근로기준법 제26조(해고의 예고)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사용자의 해고의 예고(근로기준법 제26조)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⑤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·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5. 다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규정의 내용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( 가 )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-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( 나 )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① 가: 30일 나: 15일      ② 가: 30일 나: 30일      ③ 가: 50일 나: 20일
- ④ 가: 50일 나: 30일      ⑤ 가: 60일 나: 15일

6.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,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.
-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③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.
-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.
- 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.

7. 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,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.
- ②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.
- ③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.
- ④ 사용기간이 5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8.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- 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.

9. 국제노동기구(ILO)의 핵심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(제138호)
- ② 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(제162호)
- ③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(제182호)
- ④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(제87호)
- ⑤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(제105호)

10.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?

- ①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-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-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-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
11.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.
-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(性)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.
-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(公)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
12.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근로기준법 제9조 (중간착취의 배제)
- ㄴ. 근로기준법 제18조 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
- ㄷ. 근로기준법 제21조 (전차금 상계의 금지)
- ㄹ. 근로기준법 제60조 (연차 유급휴가)
- ㅁ. 근로기준법 제72조 (깁내근로의 금지)

- ①  $\neg, \vdash$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 $\neg, \supset$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 $\neg, \neg, \square$   
④  $\neg, \neg, \vdash, \square$               ⑤  $\neg, \vdash, \supset, \square$

13.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.
-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(乳兒)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
- ④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(減給)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,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, 질병, 재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(非常)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4. 임신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.

15. 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②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.
-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.
-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16. 산업안전보건법상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( )시간, 1주 ( )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ㄱ: 5    ㄴ: 3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: 5    ㄴ: 3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ㄱ: 6    ㄴ: 30  
 ④ ㄱ: 6    ㄴ: 3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: 6    ㄴ: 34

17.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된다.  
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.  
 ③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.  
 ④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 
 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,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.

18.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.  
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.  
 ④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.  
 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.

19.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 
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  
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 
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 
 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20.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.
  - ③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용자는 가사,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.
  - 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1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  -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  -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.
22.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?
- ①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
  - ②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
  -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
  - ④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
  - ⑤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

23.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- ②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,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, 각각 같은 수로 한다.
- ③ 채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.
-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채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.

24.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, 알선,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25.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.
-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,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 제 2과 목 : 노 동 법 (2)

26.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- ㄴ.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ㄷ.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, 종교, 성별, 연령, 신체적 조건, 고용형태,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

- ① 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ㄴ, ㄷ

27.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노동조합법,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.
- ②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.
- ③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.
- ④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.
- 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.

28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·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.
- ②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.
-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29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대표자 및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-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③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④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  - ⑤ 규약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30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.
  - ②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.
  - ③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④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·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  - 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.
31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.
  -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.
  -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.

32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.
-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-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33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.
- ②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③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다.
-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.

34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.
-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.
- ③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- ④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나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,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,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.

35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며,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.
- 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.

36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조합비 공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소정근로시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단체교섭의 절차
- ④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     ⑤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

37.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.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?

- ① 재해부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편의제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휴게시간
- ④ 교섭창구 단일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근무시간중 회의참석

38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포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,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.
-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
39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(調整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.
- ②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공영기업체·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-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.

40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.
-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.
- ④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41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·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.
- ②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.
- ③ 임금인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·지시·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.
- 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,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.

42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.
-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.
- ④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.
- 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,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.

43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,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·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,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면,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.
-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(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)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⑤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44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확정에 관한 내용이다. (    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(     )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- ① 15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5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60

45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,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  -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-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·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  -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할 때에 증인의 출석과 질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.
  - 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.

46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.
- ② 지배·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.
-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.
- 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.

47.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.
-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.
-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④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.
- 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.

48.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②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-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.
-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·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.

49.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.
-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.
- ④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⑤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.

50.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(調整)사건을 관장한다.
-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·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·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.

### 제 3과 목 : 민 법

51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, 그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③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법인의 행위로써 유효하다.
- ④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,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.
- ⑤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,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(舊)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.

52.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.
- ②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,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,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.
- ④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,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.

53.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.
- ②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,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,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,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.
- ⑤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.

54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.
- ② 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-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- ④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- ⑤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.

55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.
- ㄴ.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.
- ㄷ.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.
- ㄹ.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,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① ㄱ, ㄴ      ② ㄴ, ㄷ      ③ ㄷ, ㄹ      ④ ㄱ, ㄷ, ㄹ      ⑤ ㄴ, ㄷ, ㄹ

56.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.
- ②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.
- ④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⑤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·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57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.
- ②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.
- ③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.
-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,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58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.
- ②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, 대리인이 수령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.
- ③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,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,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
- ④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한다.
- 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.

59.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.
-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.
- ④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
-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.

60.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-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- ③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,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.
- ④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.
- 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.

61.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
-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④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
62. 1997년 6월 3일(화)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?

- ① 2016년 6월 3일(금) 0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016년 6월 4일(토) 0시  
③ 2017년 6월 3일(토) 0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2017년 6월 4일(일) 0시  
⑤ 2017년 6월 6일(화) 0시

63.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불가분채권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,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
-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, A의 매매대금청구권
-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,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
-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, C의 건물인도청구권
-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,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

64.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.
- ②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.
- ③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.
- ④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, 채무자는 대위 행사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.

65. A, B, C, D(부담부분은 균등)는 E에 대하여 1,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.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.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. A, C,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A는 100만원, C는 300만원, D는 300만원
- ② A는 300만원, C는 300만원, D는 300만원
- ③ A는 300만원, C는 400만원, D는 400만원
- ④ A는 350만원, C는 350만원, D는 350만원
- ⑤ A는 400만원, C는 400만원, D는 400만원

66.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.
-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,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서의 확정일자 선후로 결정한다.
-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,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.

67.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
-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
-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
-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
-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

68.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.
-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.
- ③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-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69.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④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,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70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준 경우,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하지 못한다.
- ② 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,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-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가 허용된다.
- ④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- ⑤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71.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.
- ②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③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,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.
- ④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,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.
- 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,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.

72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,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,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.
- ④ 다른 약정이 없는 한,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73.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,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② 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,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③ 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.
- ④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.
- 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,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74.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,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여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, 여행자는 여행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,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여행계약이 중대한 하자로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,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.
- 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,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 의무를 지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한다.

75.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
-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,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
- ③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,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
-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,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
- ⑤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,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손해보상채무

#### 제 4 과 목 : 사 회 보 험 법

76.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“사회보장”이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( ), ( ), ( )(을)를 말한다.

- ①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안전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, 사회안전망
- ③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사회서비스, 사회안전망, 사회보험
- ⑤ 보편적 복지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

77.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.
- ② 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.
-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무국을 둔다.

78.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( )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① 1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15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2개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3개월

79.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80.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④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.

81.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( )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- ① 50만원      ② 100만원      ③ 150만원      ④ 200만원      ⑤ 300만원

82.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.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 
 ㄴ.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 
 ㄷ.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① ㄱ      ② ㄱ, ㄴ      ③ ㄱ, ㄷ      ④ ㄴ, ㄷ      ⑤ ㄱ, ㄴ, ㄷ

83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,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?

- ①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
 ② 최저임금액  
 ③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
 ④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
 ⑤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

84.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옳은 것은?

- ① 25세 장애인: 150일      ② 28세 비장애인: 120일      ③ 35세 비장애인: 150일  
 ④ 40세 비장애인: 150일      ⑤ 55세 장애인: 180일

85.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
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 
 ③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
 ④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
 ⑤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
86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.
- ② 상해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직장적용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.
- ④ 재활운동비는 장애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.
- 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

87.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.
-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.
-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.
-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액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.
- 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.

88.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애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내용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장애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( ㉠ )년 이 지난 날부터 ( ㉡ )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- ① ㉠: 1, ㉡: 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㉠: 1, ㉡: 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㉠: 2, ㉡: 1
- ④ ㉠: 2, ㉡: 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㉠: 3, ㉡: 2

89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한다. 이 때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몇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가?

- ① 6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9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12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15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180일

90.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은?

-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④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⑤ 출장 중에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

91.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19세가 된 때  
 ㄴ.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
 ㄷ.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된 때

- ① 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ㄴ, ㄷ

92.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.  
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.  
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.  
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.  
 ⑤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.

93.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. (   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가입기간이 ( ㄱ )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( ㄴ )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① ㄱ: 10, ㄴ: 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: 10, ㄴ: 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ㄱ: 20, ㄴ: 2  
 ④ ㄱ: 20, ㄴ: 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: 30, ㄴ: 2

94.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 
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
 ③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
 ④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
 ⑤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

95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·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96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(    )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(    )이다.

- ①    ㄱ: 55,    ㄴ: 1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   ㄱ: 60,    ㄴ: 1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   ㄱ: 60,    ㄴ: 25
- ④    ㄱ: 65,    ㄴ: 1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   ㄱ: 65,    ㄴ: 25

97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.
-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.
- ③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.
- ④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, 현재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.
- 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.

98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
-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
-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.

99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산재보험료율(100%)

= [산재보험급여지급률 + 추가지출률]( ㉠ )% + 부가보험료율 ( ㉡ )%

- ① ㉠: 70, ㉡: 3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㉠: 75, ㉡: 25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㉠: 80, ㉡: 20
- ④ ㉠: 85, ㉡: 15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㉠: 90, ㉡: 10

100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·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.
- ③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⑤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, 고용·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.

## 제5과목 : 경영학개론

101. 막스 베버(Max Weber)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?

- ① 규정에 따른 직무배정과 직무수행      ② 능력과 과업에 따른 선발과 승진
- ③ 상황적합적 관리      ④ 계층에 의한 관리
- ⑤ 규칙과 문서에 의한 관리

102. 브릭스(BRICS)로 일컬어지는 신흥경제권 국가가 아닌 것은?

- ① 인도      ② 캐나다      ③ 러시아      ④ 브라질      ⑤ 중국

103. 매슬로우(A.H. Maslow)가 제시한 욕구단계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?

- ① 권한위임에 대한 욕구      ②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
- ③ 소속감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      ④ 의식주에 대한 욕구
- ⑤ 존경받고 싶은 욕구

104.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영혁신 기법으로 옳은 것은?

통계적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경영혁신 기법이며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제품개발, 판매, 서비스, 사무업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함

- ① 학습조직(learning organization)      ② 다운사이징(downsizing)
- ③ 리스트럭처링(restructuring)      ④ 리엔지니어링(reengineering)
- ⑤ 6 시그마(six sigma)

105. 임금수준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파악이 필요하다.
- ②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들 수 있다.
- ③ 임금수준 결정 시 선도전략은 유능한 종업원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.
- ④ 임금수준의 관리에 적정성의 원칙을 지향한다.
- ⑤ 임금수준의 하한선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.

106. 허츠버그(F. Herzberg)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상사와의 관계
- ㄴ. 성취
- ㄷ. 회사 정책 및 관리방침
- ㄹ. 작업 조건
- ㅁ. 인정

- ① ㄱ, ㄴ      ② ㄱ, ㅁ      ③ ㄴ, ㄷ      ④ ㄴ, ㅁ      ⑤ ㄹ, ㅁ

107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?

전환배치 시 해당 종업원의 ‘능력(적성)-직무-시간’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간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원칙

- ① 연공주의      ② 균형주의      ③ 상향이동주의  
④ 인재육성주의      ⑤ 적재적소적시주의

108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사평가기법은?

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일상 작업생활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해 특별히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행동, 업적 등을 기록하고 이를 평가시점에 정리하여 평가하는 기법

- ① 서열법      ② 평정척도법      ③ 체크리스트법  
④ 중요사건기술법      ⑤ 강제선택서술법

109.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요구되는 지식      ② 작업 조건      ③ 직무수행의 절차  
④ 수행되는 과업      ⑤ 직무수행의 방법

110. 인간관계론에 해당하는 내용은?

- ① 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계획과 통제의 개념 확립  
②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하여 표준 과업량 설정  
③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의 존재 인식  
④ 과업에 적합한 근로자 선발 및 교육훈련 방법 고안  
⑤ 전문기능별 책임자가 작업에 대한 분업적 지도 수행

111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각 오류는?

어떤 대상(개인)으로부터 얻은 일부 정보가 다른 부분의 여러 정보들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

- ① 자존적 편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후광효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투사
- ④ 통제의 환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대조효과

112. 프렌치(J.R.P. French)와 레이븐(B. Raven)이 구분한 5가지 권력 유형이 아닌 것은?

- ① 합법적 권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기회적 권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강제적 권력
- ④ 보상적 권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준거적 권력

113.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인 촉진믹스(promotion mix)의 구성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?

- ① 선별적 유통점포 개설      ② 구매시점 진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PR(public relations)
- ④ 광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인적판매

114. 보스턴 컨설팅 그룹(BCG)의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산업의 매력도와 사업의 강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.
- ② 물음표(question mark)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투자가 필요하나 성장가능성은 낮다.
- ③ 개(dog)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확대전략이 필수적이다.
- ④ 별(star)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철수나 매각이 필수적이다.
- ⑤ 자금젖소(cash cow)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다.

115.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① 정보탐색 → 필요인식 → 대안평가 → 구매 → 구매 후 행동
- ② 정보탐색 → 필요인식 → 구매 → 대안평가 → 구매 후 행동
- ③ 정보탐색 → 대안평가 → 필요인식 → 구매 → 구매 후 행동
- ④ 필요인식 → 정보탐색 → 대안평가 → 구매 → 구매 후 행동
- ⑤ 대안평가 → 정보탐색 → 필요인식 → 구매 → 구매 후 행동

116. 제품구매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겪게 되는 인지부조화(cognitive dissonance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할 때 많이 발생한다.
- ② 구매제품의 만족수준에 정비례하여 발생한다.
- ③ 고관여 제품에서 많이 발생한다.
- ④ 제품구매 전에 경험하는 긴장감과 걱정의 감정을 뜻한다.
- ⑤ 사후서비스(A/S)가 좋을수록 많이 발생한다.

117.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 한다.
- ② 기업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상환의무를 갖지 않는다.
- ③ 주식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될 수 있다.
- ④ 모든 주식은 채권과 달리 액면가가 없다.
- ⑤ 주주는 투자한 금액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.

118. 총자산회전율의 산식은?

- ① 매출액/매출채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매출액/총자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순이익/자기자본
- ④ 총자산/매출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자기자본/순이익

119. 해리스(F.W. Harris)가 제시한 EOQ(경제적 주문량) 모형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단일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조달기간은 분기 단위로 변동한다.
- ③ 수량할인이 적용된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연간수요량은 알 수 없다.
- ⑤ 주문비용은 주문량에 정비례한다.

120. 생산시스템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일정관리      ② 시설입지      ③ 재고관리      ④ 품질관리      ⑤ 수요예측

121.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하면? (단,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)

|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|
| 영업이익   | 300,000원 |
| 이자비용   | 10,000원  |
| 영업외 수익 | 50,000원  |
| 법인세비용  | 15,000원  |

- ① 275,000원      ② 290,000원      ③ 325,000원      ④ 335,000원      ⑤ 340,000원

122.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판매수량(단위)은?

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단위당 판매가격 | 20,000원     |
| 단위당 변동비  | 14,000원     |
| 총고정비     | 48,000,000원 |

- ① 5,000      ② 6,000      ③ 7,000      ④ 8,000      ⑤ 9,000

123.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?

기업의 자재, 회계, 구매, 생산, 판매, 인사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

- ① CRM      ② SCM      ③ DSS      ④ KMS      ⑤ ERP

124. 경영정보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?

- ① 입력 자료의 내용, 양식, 형태, 분량 분석  
 ② 출력물의 양식, 내용, 분량, 출력주기 정의  
 ③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준비, 시스템 수정  
 ④ 자료가 출력되기 위해 필요한 수식연산, 비교연산, 논리연산 설계  
 ⑤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특성, 자료처리 분량 및 속도, 레코드 및 파일 구조 명세화

125. 빅데이터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NoSQL, Hbase 등을 분석에 활용한다.  
 ②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.  
 ③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.  
 ④ 빠르게 변화하거나 증가하는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다.  
 ⑤ 제조업, 금융업,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.



한국산업인력공단  
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

모두가 일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